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Smart Choice**



○  
**NH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행복한 노후에  
NH투자증권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

## 가입자교육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일반, 부담금 납입 현황,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IRP와 기업형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

---

## 가입자교육의 중요성

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지식 수준은 본인 퇴직연금 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DC, 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변동되므로, 가입자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

## 가입자교육 방법

알림톡, 전자문서, 이메일, 우편, 사내게시,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집합교육(사업장 방문)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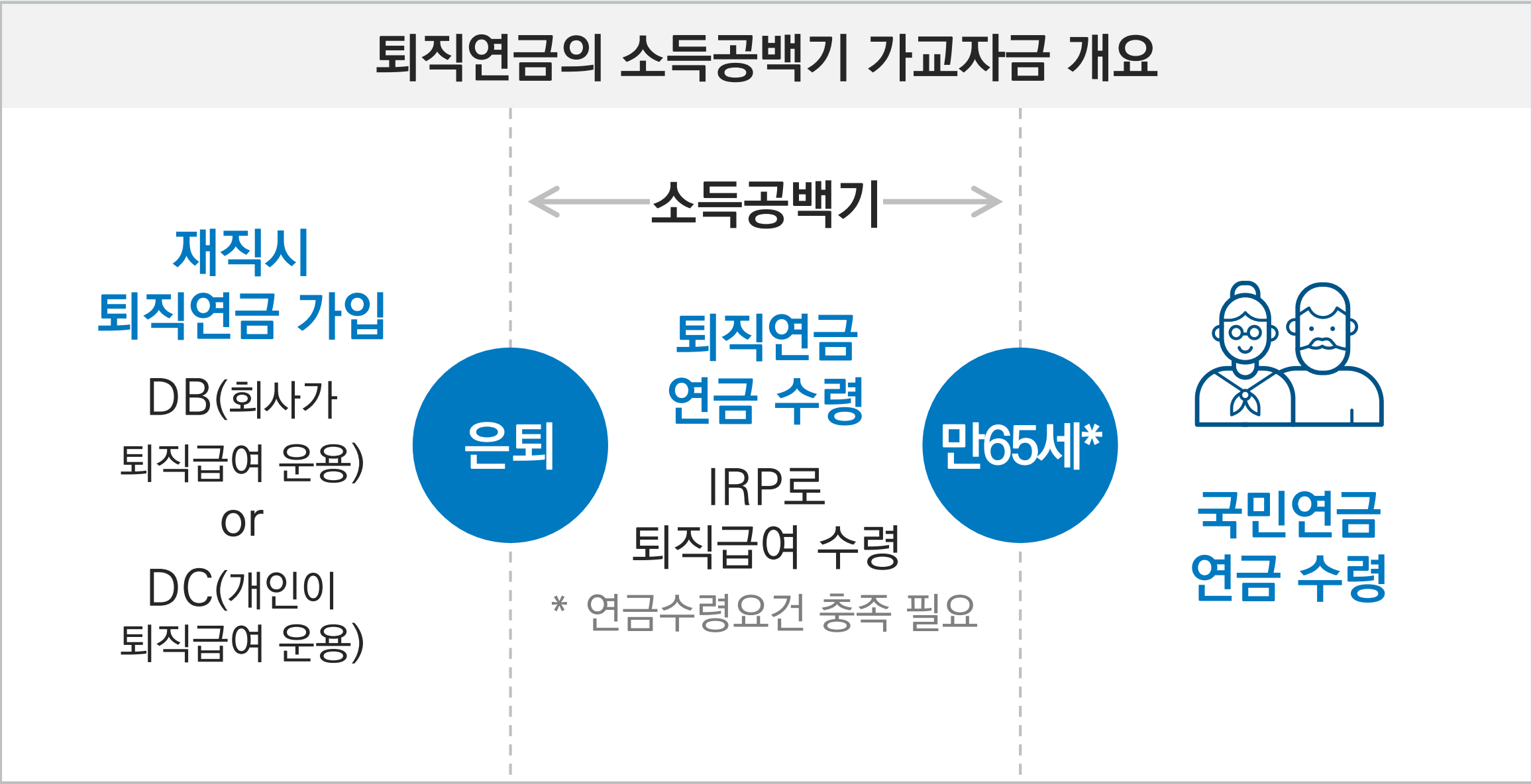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 노후 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2000년 7.2% → 2010년 10.8% → 2022년 17.5% 급격히 증가
국민연금 부족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기본 노후 보장 여력인 국민 연금 수령액이 감소
은퇴 후 집중 소비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수준 또는 자녀 결혼 등 소비를 집중시키는 원인에 의해 노후 생활 불안

## 퇴직연금, 소득공백기의 중요한 가교자금

-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1969년생 이후 기준)인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합니다. 이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자금이 퇴직연금입니다. 오랜 직장생활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소득이 없는 시기에 가교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1년 ~ 64년생 63세, 1965년 ~ 68년생 64세, 1968년생 이후 65세

## 노후 설계 시 고려사항

- 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은 크게 청년기, 신혼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 특히 결혼, 자녀교육, 내집마련 등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이벤트성 재무 문제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자산·부채 관리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구분	청년기	신혼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슈	결혼자금	출산/ 자녀교육	부채상환/ 은퇴계획	노후생활
투자 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소비
자산 관리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 성향	적극 투자시기	위험 중립시기	위험 중립시기	안정 추구시기
위험자산 투자비중 (예시)	70%	60%	5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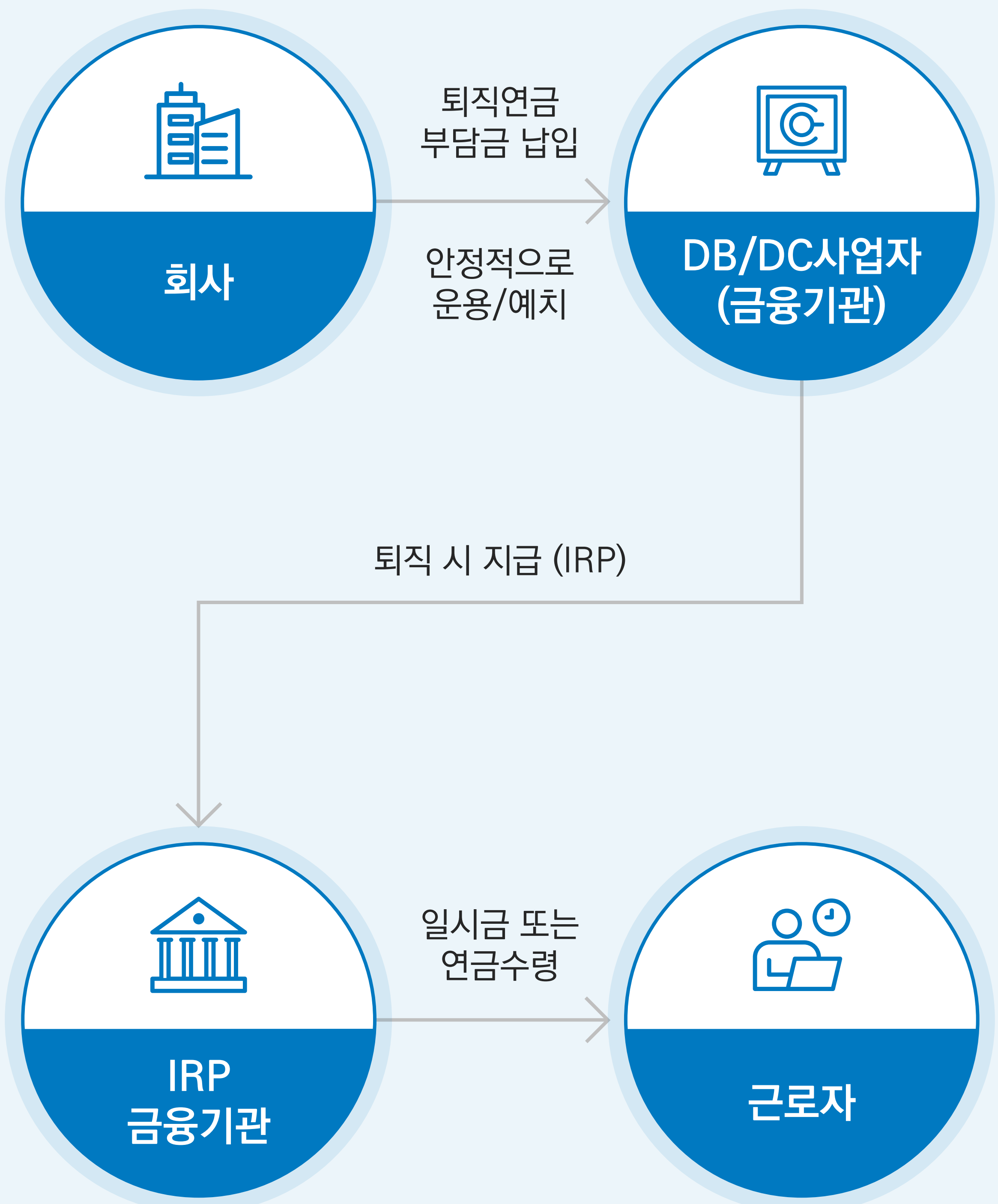
## 노후생활비 체크하기

노후생활비 체크포인트	
1	노후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수준이 적정
2	은퇴 후 지출부담이 높아지는 항목 및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필요
3	주거관련 비용,의료비,여가활동비,비소비지출 등 계획적인 관리 필요



## 퇴직연금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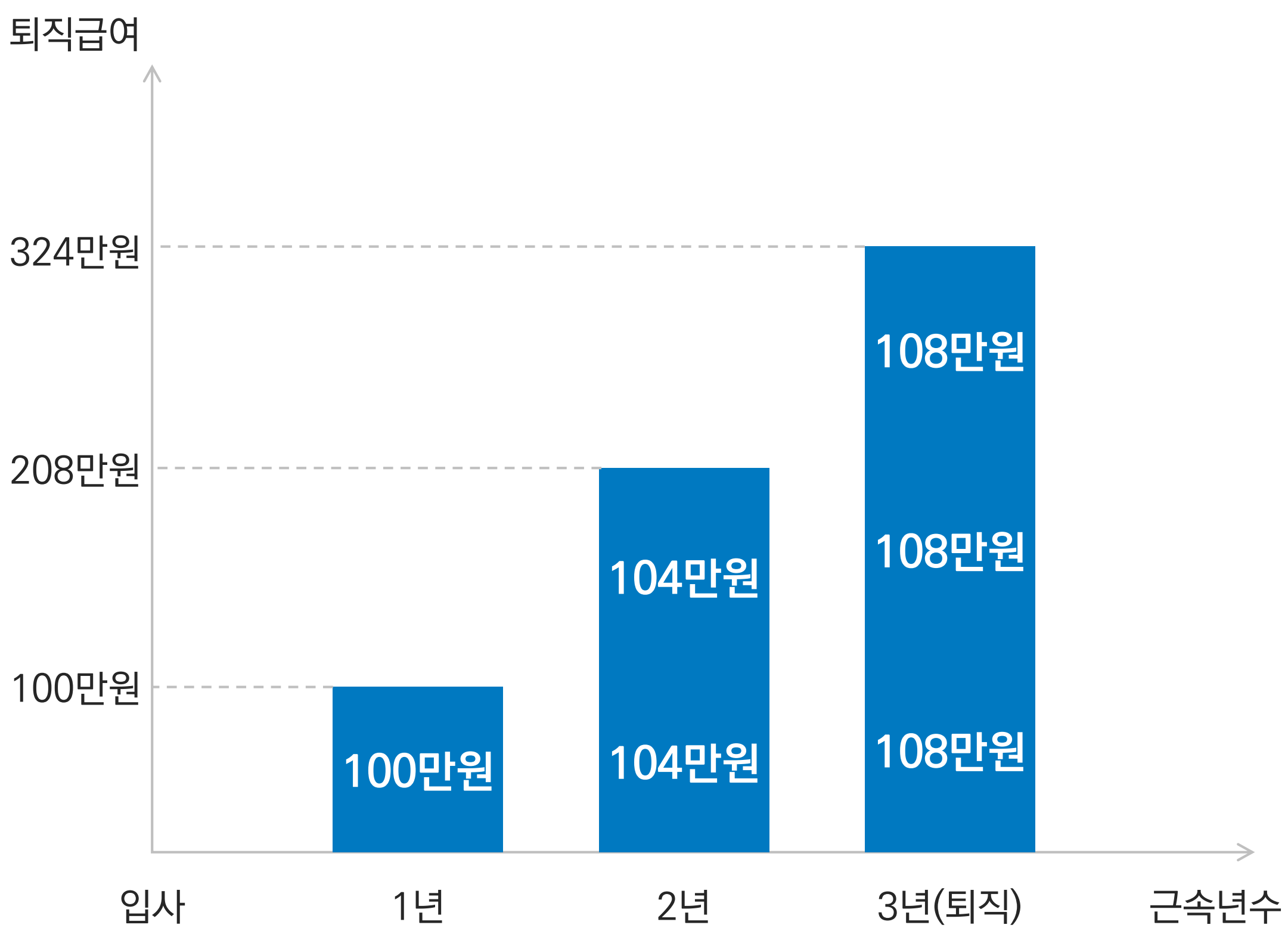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사용자)가 근로자(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DB/DC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으며 재직중 회사가 도산·파산하여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매년 임금상승률 4% 가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08 × 3 = 324만원**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Defined Contribution

-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 매년 근로자의 개별 계정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필요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통화지급</b>   기본급, 연차수당,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등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li><li>■ <b>현물지급</b>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현물급여</li></ul>
평균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영성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 의무가 없는 경영성과급</li><li>■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li><li>■ 경조금, 의료비, 실비변상적인 급여</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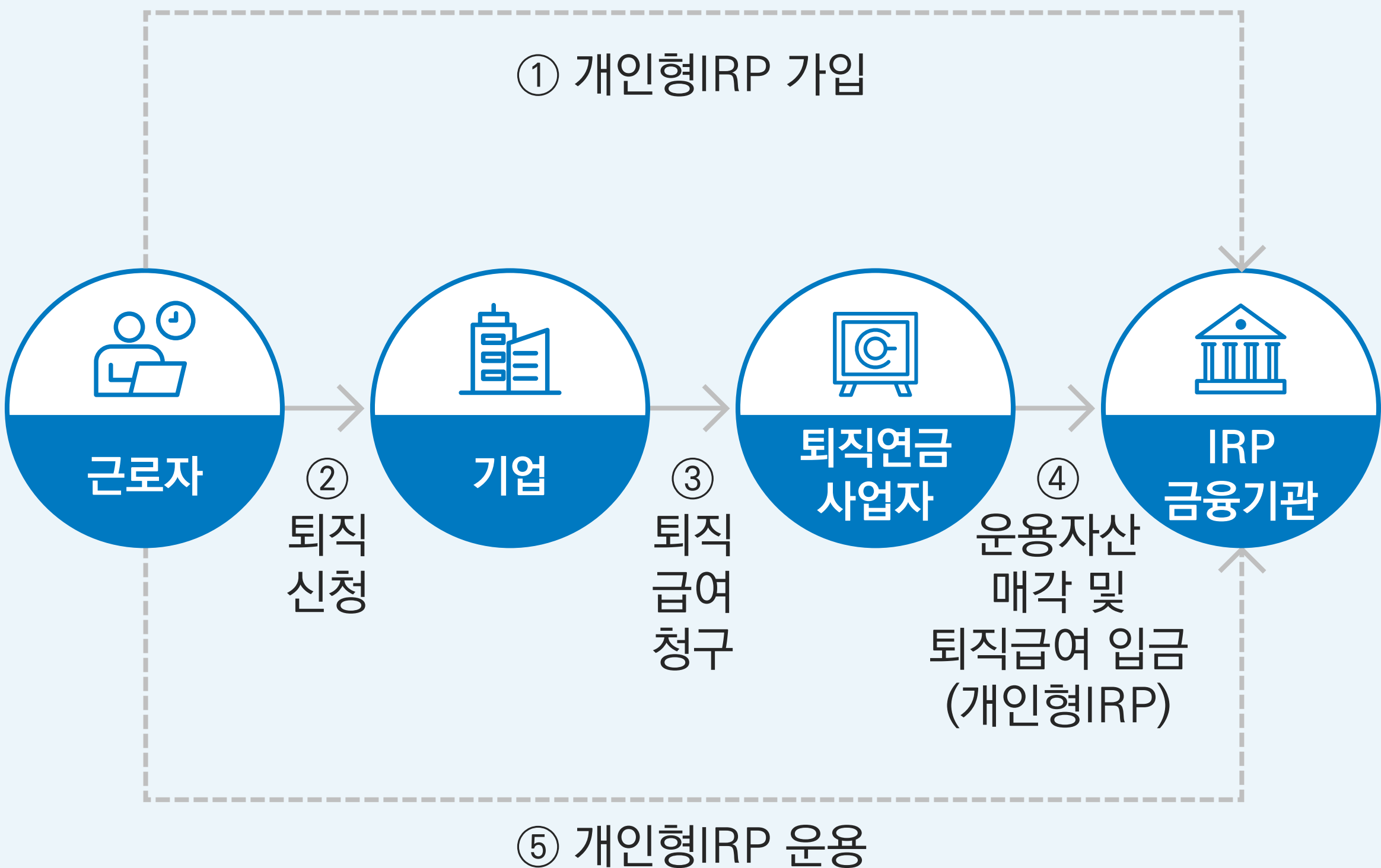


# 퇴직 시 퇴직급여는 IRP로 받아야 합니다

##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절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 단,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급여 지급 절차 ]



###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예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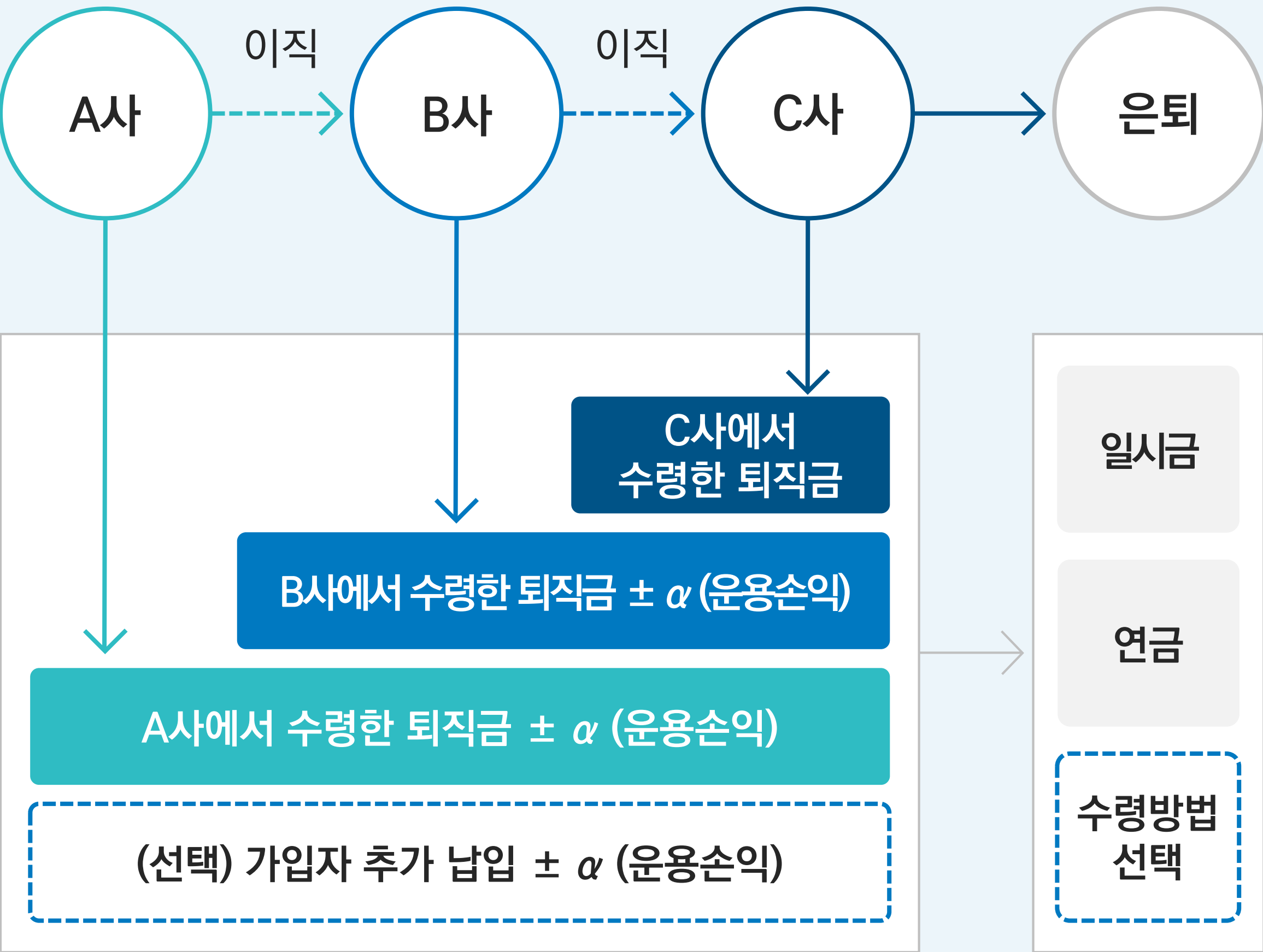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 타 법률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경우 잔여 금액은 개인형IRP 등으로 이전)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개인이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 통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수령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필요 시 해지하여 일시금 으로 수령 가능하며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퇴직연금 및 퇴직금제도 가입자
- 공무원, 교직원, 군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 퇴직연금은 인출할 때만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과세방식

-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납입	»	운용	»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퇴직소득 과세이연 → 퇴직소득세만큼 투자원금 증가</li><li>추가 납입액 세액공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자·배당소득 과세이연 → 이자·배당소득세 만큼 투자자산 증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득원천과 수령형태 (일시금/연금)에 따라 → 퇴직소득세, 연금 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li></ul>

## 인출방식별 과세체계

소득원천		인출 순서	인출방식별 과세 방법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이연 퇴직소득		2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 (60%)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60%) 분리과세)
추가 납입	세액 공제 X	1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세액 공제 O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5.5~3.3%)</li><li>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2024년부터 1,500만원 초과로 개정 예정)   전액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가능</li></ul>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연금소득세 (5.5~3.3%) 과세
운용 수익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급여(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배수(12배)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환산배수(12배)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	차등 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과세표준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별도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1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기 (추가 납입)

- 퇴직연금(DC/IRP)에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적립하고, 최대 198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초과 (4,500만원초과)
기본한도 (연금저축 단독)	900만원 (600만원)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최대 공제한도	최대 1,200만원	
세액 공제율	16.5%	13.2%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 198만원	최대 158.4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을 모두 퇴직연금(DC/IRP)에 납입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DC/IRP)에 나누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ISA 만기금액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div><div> 부부중 1명 60세 이상</div><div></div><div><div> 부부 합산 1주택자</div></div></div>
대상 주택	종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한 금액 1억원 한도)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2

###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하기 (IRP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 시)

- 개인형IRP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인출 또는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
2	사회적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3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4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5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인출액이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인출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5.5~3.3%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 DC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C에서 퇴직급여가 중도인출 되는 경우는 제외)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3

## 퇴직소득세 30% / 40% 감면 받기 (연금 수령)

- 퇴직급여를 개인형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인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 이때 개인형IRP에 입금한 세전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 개인형 IRP에 입금하여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년 초과
감면율	30%	40%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액 x 이연퇴직소득세율 x 70%(60%)

\* 이연퇴직소득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예상 금액 (예시)

퇴직급여	근속기간	일시금 수령액 (세후)	평균 연금 수령액 (세후)	누적 연금 수령액 (세후)
5천만원	13년 가정	4,950만원	300만원	6,005만원
1억원	20년 가정	9,877만원	609만원	1억 1,995만원

\* 적용 가정 : 2023년 퇴직, 만 55세 연금 개시, 예상수익률 2%, 20년간 연 1회 수령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4

## 연금수령하면서 더 절세하기

- 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 수령합니다.
- 10년(또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거나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분할 수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 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 2013.02.28 이전 가입 : 5년
  - 2013.03.01 이후 가입 : 10년
- 연금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만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합니다. (2024년부터 연간1,500만원으로 세법 개정 예정)
  -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하여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과세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금액과 상관 없이 분리과세)
  -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

연금 종류		한도 적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IRP)	이연퇴직소득	X
	본인 추가 납입액(세액공제분만 해당), 운용수익	O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세액공제분만 해당), 운용수익	O
	(구)개인연금, 연금보험	X

# 2024년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 \*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발표)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연금저축, 퇴직연금	좌동
세율	연령별 5.5~3.3%	좌동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간 1,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더 알아봅시다

## 중도인출/담보대출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O	O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총 1회 한정	O	O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 ※ 청구일 직전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가능	O	O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O	O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 이하로 중도인출 가능	O	X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 가능	X	O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	X	O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 가능	O	O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O	X

\* 가능 제도 : 중도인출(DC, IRP), 담보대출(DB, DC, IRP)

\* 가능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중도인출), 50%(담보대출)

\* 당사는 현재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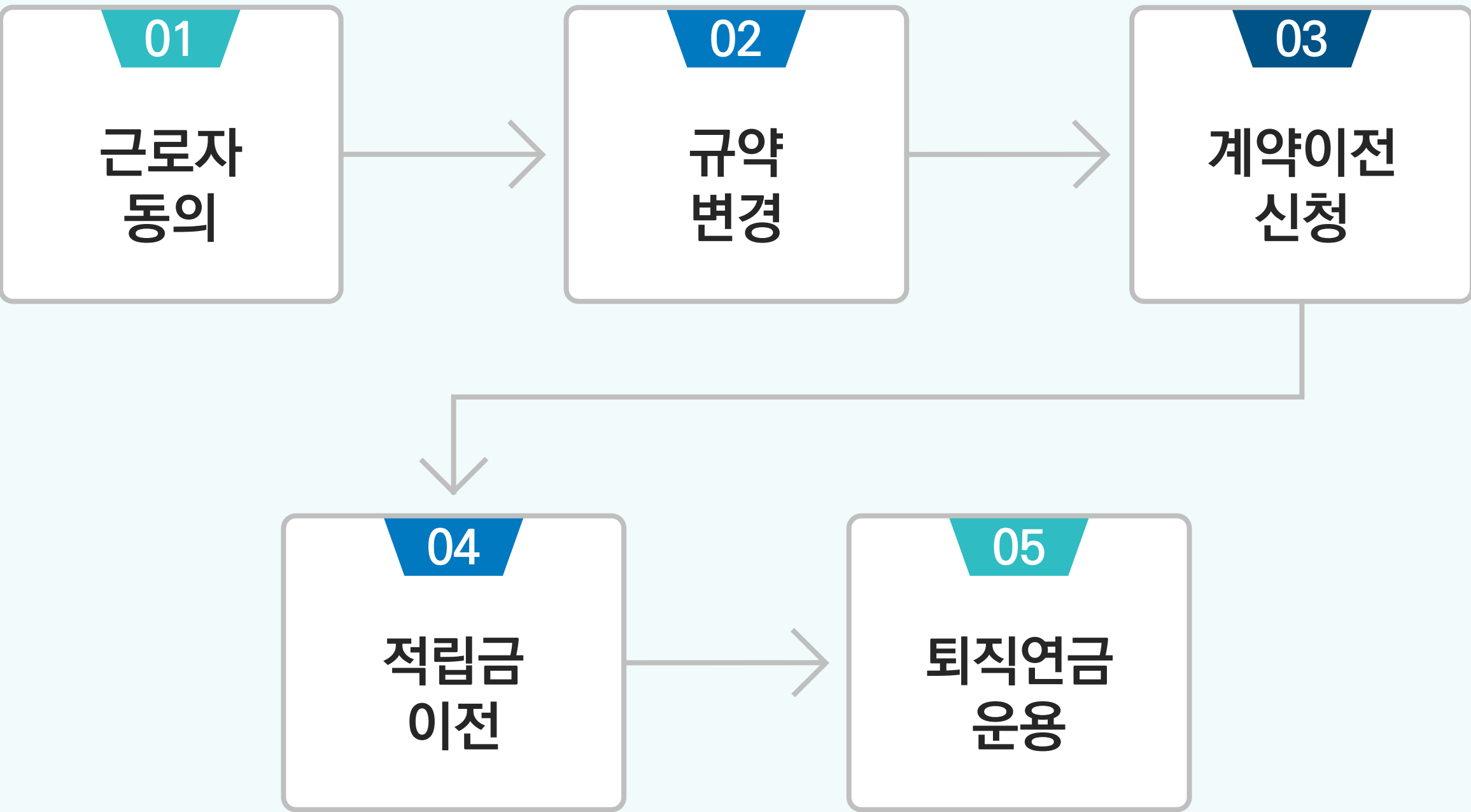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 중단/폐지

-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경우 중단된 기간 또는 폐지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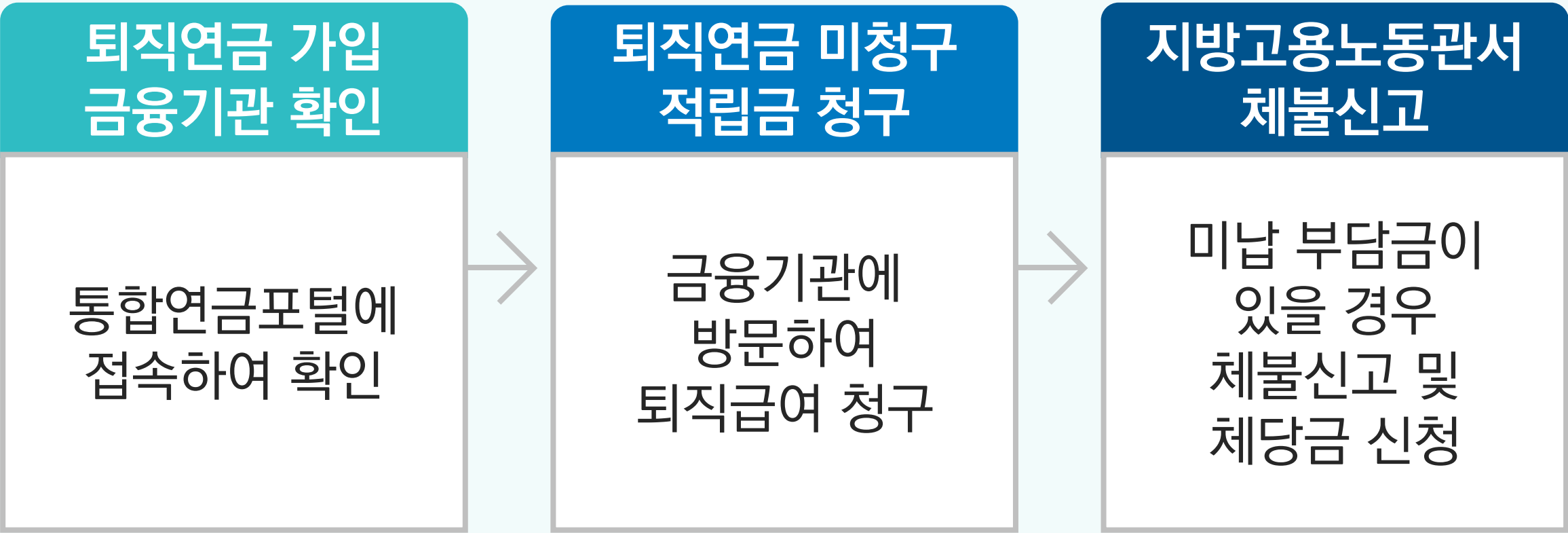
중단	<p><b>사유</b>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등</p> <p>→ 가입자의 추가납입, 퇴직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p>
폐지	<p><b>사유</b>   노사합의 등</p> <p>→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이는 중간정산으로 간주</p>

## 계약(적립금)이전

- 계약이전이란 퇴직연금사업자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이전을 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보관됨



기업 도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 청구절차 및 방법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수령	
수령 금액	
제도유형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급여형(DB)	30일분 평균임금 x 적립비율*
확정기여형(DC)	납입부담금 ± 운용손익
사용자가 납입한 적립금	
* 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예상액	
→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비율, 운용손익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 확정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계정으로 지급되며, IRP 계정이 없을 시 금융기관에서 IRP 계정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단, 개인형IRP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	

# 확정급여형(DB) 추가 교육사항

##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 ■ 재정검증이란

DB제도 퇴직연금 도입 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 평가액이 법정 최소적립수준(최소적립금) 이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 \* 최소적립금

기준책임준비금의 법정 최소적립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 \* 법정최소적립수준

대상연도	2012~ 2013년	2014~ 2015년	2016~ 2018년	2019~ 2020년	2022년~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과거근로기간과 가입연차에 따라 별도 산출

#### \*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 \* 계속기준책임준비금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지급될 퇴직급여 및 그 지급 시점을 기초율(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 (연금계리 방식)

#### \*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가입자가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

##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 ■ 재정검증 결과 부족 시 (적립금 평가액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근로자(과반수 이상 가입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통보
- ② 사용자는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

\*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작성·미통보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500만원)

- ③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 적립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1회 위반 : 200만원, 2회 위반 :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 1천만원)

\* 부족비율 = 최소적립비율 - 적립비율(재정검증 결과)

※ (예시) 전년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가 최소  
적립비율 100%, 적립비율 85%인 경우

→ 부족비율 15%이므로, 부족비율의 1/3인 5% 이상을  
해소해야 함

→ 당년도 사업연도 말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이 90%  
(85% + 5%)이상이어야 함

### ■ 재정검증 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초과 시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한 경우 | 사용자 요청 시 반환 가능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150% 미만 초과한 경우 | 향후 납입할 부담금 상계

## 적립금 운용 목표 및 수립

DB제도 적립금 운용의 최종 목표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있고, 이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주체인 사용자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최소 적립수준 유지	방만한 운용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급권 보장에 충실한 운용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법정 최소적립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부채 관리	임금상승 등 퇴직급여채무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부채의 변동을 고려한 자산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 관리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투자원칙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

- 대상법인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용자에 한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7명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회의 및 IPS 작성 필요
  - 위원장 | 퇴직연금제도 운용 업무 담당 임원
  -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여 선출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500만원)
-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 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추가 교육사항

## 사용자부담금 납입

부담금 납입수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추가 납입 가능)
부담금 납입시기	연간 1회 이상이며,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 사용자부담금 납입 지연 시

- DC 및 기업형IRP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 만큼 법이 정하는 지연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입유예기일 : 연장된 납입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지급유예기일 : 연장된 지급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 디폴트옵션이란?

- DC/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의무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으로 2022년 7월 12일 최초 도입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디폴트옵션 개요

적용 대상	<div>DC 가입자</div> <div>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법인의 근로자</div> <div>기업형/개인형 IRP</div> <div>누구나 가능</div>
	<div>※ DC법인 도입은 의무도입(법적의무사항)</div> <div>※ Opt-in (직접매수)은 법인 도입여부 관계없이 가능</div>
적용 대상 금액	<div>[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div> <div><div>신규 입금 부담금</div><div>디폴트옵션 선정 후 입금분</div><div>만기상환 자금</div><div>만기가 있는 예금, 채권,ELB 등</div></div>
	<div>※ 단, 아래의 부담금/만기상환자금 등은 디폴트옵션 적용 제외</div> <div>① 입금예정분 매수비율이 지정된 계좌의 신규입금 부담금</div> <div>② 만기예약 운용지시가 지정된 계좌의 만기상환자금</div> <div>③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한 상품매도자금</div>

## 디폴트옵션 선정 이후 적용 대상 및 프로세스



##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6가지

### 01 DC·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선정하세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DC,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선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DC 가입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반영한 후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 02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세요

투자위험, 목표를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세요. 디폴트 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 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 디폴트옵션의 상품구성 (예시)

디폴트옵션 운용상품은 정기예금, 펀드, TDF 등의 상품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며 투자위험성에 따라 구성상품의 비중이 상이합니다. 즉,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1 원금보장 & 예금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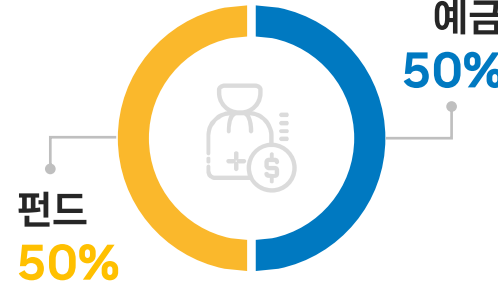
정기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02 초보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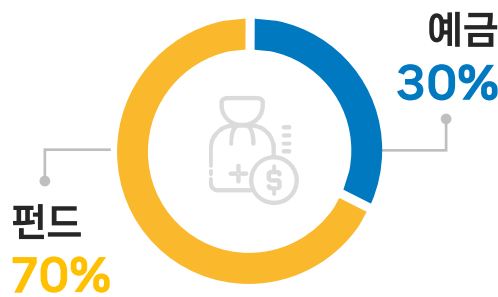
펀드와 예금 비중  
50:50



저위험 포트폴리오

#### 03 중급 투자자

펀드와 예금 비중  
70:30



중위험 포트폴리오

#### 04 적극적 & TDF선호

은퇴 시점에 따른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



고위험 포트폴리오

##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6가지

### 03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아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사전에 선정”해 놓고 실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최대 6주 대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기존 보유상품은 디폴트옵션 선정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04 디폴트옵션을 대기기간 없이 바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지시 하는 경우(옵트인)에는 최대 6주 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직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반영하지 않아 디폴트옵션 선정이 불가한 DC가입자도 직접 운용 지시(옵트인)로 디폴트옵션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05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자동재예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2023.7.12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재예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 옵션을 선정하세요. 가입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도래자금은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되어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06 디폴트옵션 공시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고르세요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http://www.moel.go.kr)-정책자료실)

금융감독원([www.fss.or.kr](http://www.fss.or.kr)-통합연금포털)

# 적립금 운용 이해하기

## 운용가능 상품의 종류 및 특징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원리금 보장형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상품의 경우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상품은 원리금보장형상품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분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대상 상품	정기예금, ELB, RP, 발행어음, GIC 등	채권, 펀드, ETF 등
상품 운용 관련 보수/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별도)	없음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선취/후취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매도 관련	만기 전 매도 시 패널티 발생	환매 시 적용 기준가   매도주문일로부터 n영업일의 기준가 (상품별 약관 및 투자설명서 참고)

\* 각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투자유형에 따른 자산구성 (예시)

- 어떤 운용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지고, 나의 은퇴 자산이 달라집니다.
  - ➔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노후 설계, 현재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한 현명한 자산배분이 필요합니다.

### [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 예시 ]

구분	자산배분비율(예시)	투자성향
안정형	원리금보장형 100%	투자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수익이 적더라도 확실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가입자
안정 추구형	원리금보장형 70% 실적배당형 30%	일정 수준의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입자
위험 중립형	원리금보장형 50% 실적배당형 50%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이상의 기대수익을 요구하는 가입자
적극 투자형	원리금보장형 30% 실적배당형 70%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시중금리 + $\alpha$ 의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입자
공격 투자형	실적배당형 100%	

##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및 투자한도

-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비위험자산(원리금 보장상품)과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구분되며, 위험자산은 총 적립금의 70%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합니다.
-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할 경우 투자한도 초과사실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되며, 위험자산 비중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지는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 TDF는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 나가는 상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총 적립금의 100%

비위험자산 (원리금 보장)	정기예금, ELB, RP,채권(국고채,통안채,물가채 등) 채권형펀드·ETF(BBB-미만 채권 30% 이내)
-------------------	--

70%

위험자산 (원리금 비보장)	주식형펀드·ETF,회사채, 채권형펀드·ETF (BBB-미만 채권 30% 초과) 상장리츠·인프라, 대체자산투자펀드·ETF, 자산배분형 펀드
-------------------	---

100%

TDF (비위험+위험)	적격 Target Date Fund (설정시 주식 비중 80% 이내, 목표 연도에 주식비중 40% 이내 등 조건 충족하는 TDF)
-----------------	--

위험자산 투자 가능 상품 및 투자한도

구분	투자가능상품	투자한도	
		DB	DC/IRP
지분증권	상장주식	70%	투자 불가
	상장리츠 (동일법인 발행증권 30% 한도)		70%
채무증권	지방채, 회사채(투자적격등급) (동일법인 발행 30% 한도)		
집합투자 증권	주식형 / 주식혼합형 (주식편입비중 40% 초과 펀드)		
파생결합 증권	최대손실한도 40% 미만의 ELS/DLS		
사모펀드		70%	투자 불가
적격 TDF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		100%

## 퇴직연금 유의사항

- ※ [공통]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공통]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공통]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DC] 퇴직금재원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하게 부과되며, 가입자 회사가 납입.  
단, 가입하시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발생합니다.
- ※ [IRP-QV] 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8%~0.15%)와 자산 관리수수료(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단, 가입하시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발생합니다.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 연간 일자별 평가금액의 평균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 ※ [IRP-나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하시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발생합니다.
- ※ [채권] 발행사/발행국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구분
- ※ [ELB]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하므로 상환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LB투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수(ETF별 상이, 상세 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는 추가발생 합니다.
- ※ 리츠매매 시 매매수수료는 무료이며 ,매매수수료 외 제세금(KOSPI기준 증권 거래세 0.08%, 농어촌특별세 0.15% 매도 시 체결 금액기준 징수), 보수비용 (리츠 별 상이)이 발생하며 보수비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